

이제는 수씨!
수씨의 주권을 찾다

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

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431-8161 최문영 사무처장, 차성수 부장 /
인천YWCA 424-0524 김자영 사무총장, 김선아 과장 /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-2950 이순정 팀장

시행 : 2021년 12월 10일

수신 : 각 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

제목 :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에 관한 건

1. 귀 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인천주권찾기를 위한 인천 시민공약을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첨부 :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 여부 요구서.

회신기한 : 12월 16일(목) 이메일 choimy84@naver.com

< 끝 >

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직인생략



담당 차성수 부장

공동사무처장 최문영

공동대표 참여단체 대표

시행 인주위 2021-4 (2021. 12. 10)

접수

(2021. . .)

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YMCA 사무처 / 홈페이지 주소 www.icymca.or.kr

전화 032-433-1388, 437-9422 / 전송 032-434-1388 / 이메일 choimy84@naver.com

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



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서 ■

1. 정치 주권

1-1. 지방분권 실현 위해 ‘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’

- ▲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, 해양수산청,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.
- ▲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 강화

: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및 총량규제 등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로 이관

②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심의 의결

: 국무총리, 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, 지방 4대협약체 장이 참여

: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

③ 국회에 상설적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, 균형발전정책 심의

- 기타 의견 :

1-2. 주민자치 실현과 ‘시민 공천권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

- ▲지방정치의 탈정당화, 탈이념화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우선 해결해야.
- ▲지역 유권자단체에게 공천권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통해 주민자치,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.

- 공약 채택 여부 (검토)

: 지방정치의 탈정당화가 아닌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하고, 시민사회 및 소수정당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로 보장되어야 함.

: 따라서 투표의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.

- 기타 의견 :

1-3. ‘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’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

- ▲사연 갖고 등지 뜬 인천 소재 공공기관(극지연구소, 항공안전기술원, 한국환경공단,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환경인재개발원, 국립환경과학원 등)의 지방이전 계획 재고.
- ▲공항·항만 도시이자 바이오·친환경에너지 도시인 인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적극 유치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- 기타 의견 :

2. 경제 주권

2-1. 인천 역차별 하는 ‘수도권 규제’ 개선

- ▲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규제프리존법 전면 개정.
- ▲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항·항만·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수도권 규제의 우선적 개선.

- 공약 채택 여부 (검토)

①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및 총량규제 등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로 이관

② 국회에 상설적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, 균형발전정책 심의

- 기타 의견 :

2-2.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위해 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

- ▲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정비(MRO), 인재 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, 공항경제권 개발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.
- ▲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광역 연계교통망 조기 구축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: 법 제정 등 제도 마련

- 기타 의견 :

2-3. 인천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개선 위해 ‘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’ 제정

- ▲해양·항만·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‘부산 쏠림현상’ 개선.
- ▲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개발 추진(항만시설의 ‘민간 소유권 취득’ 보장 문제, 제도개선)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(재정투자 비율 : 광양항 100%, 평택항 75%, 부산항 50%, 인천항 25%)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: 법 제정 등 제도 마련

- 기타 의견 :

3. 환경 주권

3-1.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·에너지·쓰레기 시설의 ‘인천 집중’ 문제 해결

- ▲서울·경기·인천의 ‘수도권매립지 갈등’ 중재·조정 및 ‘선제적 조치’ 우선 해결.
- ▲탈(脫)석탄, 탄소중립 정책에 의거 ‘전력·에너지·쓰레기 시설 분산·재배치’ 추진.
(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후 대책,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 선정 논란 등)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①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

② 폐기물 배출지역 발생자 책임원칙 수립으로 환경정의 실현

③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이익은 지역사회로 모두 환원

④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에너지 수요지역 인근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

⑤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및 가칭 수도권탄소중립위원회 설치

- 기타 의견 :

3-2. ‘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’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

- ▲정부 <수소경제 성과 및 선도국가 비전보고> 발표, 수소 사용량 22만t → 2,700만t(2050년) 확대.
- ▲수소 공급망의 중심에 선 인천이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.

- 공약 채택 여부 (검토)

: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이라는 대 전제는 동의하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에는 검토가 필요.

: 2020년 전력자급률은 서울 11.2%, 경기도 58.2%로 서울과 경기도가 매우 낮은 전력자급률을 보이는 반면 인천은 241.7%로 인천시 전력의 2.4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. 오히려 인천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 생산 비율을 낮춰 나가야 함.

: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하며, 이를 토대로 인천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함.

: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실제 필요한 에너지 비율을 재생에너지를 충당 등의 계획 마련이 필요.

: 이를 위해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, 가칭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칭 수도권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- 기타 의견 :

3-3. '물이용 부담금' 폐지 및 '안전한 수돗물' 대책 강구

- ▲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이 준조세로 변질된 데다가 한강수계 기금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도 논란도 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.
- ▲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는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개선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① 물이용부담금 제도 폐지

② 한강 상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정부가 예산 편성해 국회를 통해 심의 할 수 있도록 함.

- 기타 의견 :

4. 교육 주권

4-1.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'취업 역차별 제도' 개선

- ▲인천국제공항공사, 인천항만공사, 한국남동발전(주),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국가공기업 인재채용 시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채용구조 개선 필요.
- ▲'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', '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'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가점 등 부여. 정치권의 역차별적 법 개정 움직임 중단해야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
: 관련법 등 제도 정비 추진

- 기타 의견 :

4-2.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'국립인천해양대학' 설립

- ▲해양대학(부산·목포)이 비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(접근성) 취약함.
- ▲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항만·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대학을 신설하거나 분교를 설치해야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: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반영
 - 기타 의견 :

4-3.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인재 양성 위해 ‘인천’국립과학기술원’ 설립

- ▲과학기술원(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)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으로 설립된 정부 관할 특수대학으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과학기술원(대전) 등 운영되고 있음.
- ▲인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과학기술원(INIST) 설립이 필요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: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반영
 - 기타 의견 :

5. 문화 주권

5-1.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‘KBS 수신료, 인천 환원’

- ▲KBS 수신료 납부현황(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)을 보면, 경기(1,241억, 19.8%), 서울(1,170억, 18.7%), 인천(516억, 8.3%), 부산(502억, 8%), 대구(429억, 6.9%) 순이지만 인천의 경우 방송총국, 지역국 등의 인프라가 없는 공영방송 소외 지역임.
- ▲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‘수신료 환원’을 통해, 인천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·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언론환경 개선에 투자해야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: 법 개정 등 제도개선
 - 기타 의견 :

5-2. ‘해양문화도시 인천’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▲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극지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‘한국극지연구원’으로 승격·확대해야함.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(母港)이어서 남·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서는 ‘제2쇄빙연구선’ 모항으로 지정되어야함.
- ▲우리나라 해양도시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은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‘부산 우선’ 정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음. 이에 인천이 극지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기회로 삼아 해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: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반영
 - 기타 의견 :

5-3. 청소년 활동 및 지원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

- ▲코로나19 등 시대전환기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·지원 시설운영은 전문화되어야함. 그러나 인천은 시설 수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다가,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에 의한 관 주도의 시설운영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- ▲ 이에 수련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을 규정한 「청소년활동 진흥법(제16조 등)」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우선적, 청소년 주체적 관점으로 전문적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.

- 공약 채택 여부 (채택)
- :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보장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
- 기타 의견 :

< 끝 >